

POLITICS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전남도, 친환경車 기반 ‘넷제로 시티’ 실증 온힘

‘2기 전남기본사회위’ 출범
조계원, 전남위원장 맡아

전남형 기본사회 정책개발을 목표로 더불어민주당 전남기본사회위원회(제2기·위원장 조계원 국회의원)가 새롭게 출범한다.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사진)은 “‘2기 전남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을 순천청암대학교에서 오는 12일 오후 4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주민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형 기본사회 정책 발굴에 힘을 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박주민 수석부위원장, 조계원 전남기본사회위원장 등 내외빈 인사말과 기본사회 특강(박주민 수석부위원장), 전남 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단·정책자문단·교문단 등 임명장 수여, 비전선포식,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계원 전남위원장은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사회가 기본사회다”라며 “기본사회 정책이 전남에 이미 뿌리내리고 있는 만큼 소멸 위기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또 “전남기본사회 구축으로 전남도민들에게 기본적 삶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기본사회위원회 2기를 발족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수석부위원장에는 박주민 의원이 선임됐으며, 2기 전남기본사회위원회에는 조 의원이 임명됐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인재개발원, 체험 교육 확대
5개 기관과 콘텐츠 발굴 협약

전남도인재개발원이 도민과 공직자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해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전남도인재개발원은 9일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담양(사)한국전통장보존연구회, 나주 아트스페이스영산포, 강진 와보랑계박물관과 함께 ‘우수 교육콘텐츠 발굴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은 강의 중심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건강·문화·예술·전통 분야 체험형 콘텐츠를 발굴해 교육 현장에 접목하기 위해 추진됐다.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은 바다와 해풍, 햇볕 등 전국 최초 자연 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한국전통장보존연구회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장 담그기’ 전통을 바탕으로 전통 식문화 체험교육을 운영한다.

아트스페이스영산포는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와보랑계박물관은 도민과 공직자가 지역 문화를 접하도록 전시·관람형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윤연화 전남도인재개발원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육 협력을 넘어 도민과 공직자가 삶 속에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실용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인재개발원은 2023년부터 드론, 식물, 정원, 건강, 지역관광 등 다양한 분야 기관과 협력해 체험형 교육콘텐츠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했다. 앞으로도 공직자 실무교육은 물론 도민 참여형 교육콘텐츠를 단계적으로 확대 재생산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배터리 전력 저장…필요시 자원화 에너지 순환체계
과기부 공모 선정…2026년까지 29억5000만원 투입

전남도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에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시 자원화 활용해 에너지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친환경 자동차 기반 넷제로 시티(Net Zero City) 실증사업’에 온힘을 쏟고 있다.

전남은 전국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량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조건에 따른 전력 생산량의 변동성, 공급 과잉 및 부족 현상 등 전력 관리의 어려움이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기반으로, 전기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친환경 자동차 기반 넷제로 시티 실증사업을 지난해 4월부터 추진 중이다.

사업은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과제로, 2026년까지 3년 동안 총사업비 29억 5000만 원(국비·지방비 각 13억 5000만 원·민간 2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

넷제로 시티 실증사업은 전기차 배터리에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시 건물이나 시설에 재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효율적 에너지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핵심은 전기차와 전력망 간 양방향 에너지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V2G(Vehicle to Grid)’ 기술을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시설로 공급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전기요금 절감 효과와 운영 경제성을 검증하고, 실질적 수익 모델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전기차 소유자는 충전 후 남은 전력을 판매함으로써 차량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고, 건물 운영자는 보다 저렴한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제난 등 비상 상황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전기차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가능하며, 전력망 안정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4월 원활한 사업 수행

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과제 협약도 체결했다. 도는 행·재정적 지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 업무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사업 전반 총괄 관리·성과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사업에는 ㈜아우토크립트와 ㈜아이오티플러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참여한다. ㈜아우토크립트는 전기차-충전기-운영 서버 간 보안 통신 기술을 개발한다. ㈜아이오티플러스는 전기차와 전력망 간 충·방전 실증을,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배터리 충·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화도 테스트를 맡았다.

실제로 지난해 전기차 데이터 수집장치(OBD2) 개발과 충전 케이블만 꽂으면 인

증·요금·결제·충전까지 한 번에 처리되

는 ‘PnC 인증시스템’을 개발중이며, 차량 대시보드통신(V2X) 실증 테스트 장비구축 등 연구개발 기반 조성도 함께 추진했다.

올해는 전기차·충전기·충전사업자 간 데이터 전송과 정보보호 솔루션, 전기차충방전 결제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서비스 모델 발굴과 데이터 분석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사순절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미래 전기차 상용화를 대비하기 위해 충전기, 전력망 간 연계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안 통신, 양방향 충전, 결제 시스템 등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전기차 기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서비스, 전력 거래 모델, 디지털 플랫폼 사업으로 확장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신보 이사장에 염규송씨 임명
30년 금융 경력…중기·소상공인 버팀목 기대

광주시는 9일 염규송 제11대 광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염규송 신임 이사장은 지난해 24일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받았으며, 31일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채택돼 이날 공식 임명됐다.

임기는 2025년 4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2년 간이다.

염 이사장은 1995년 광주은행에 입사한 이후 30여년 간 금융 현장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지정장으로 근무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의 목소리를 가까이 청



취하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수행한 현장 소통형 금융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비상무이사로 활동하며 지역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염규송 이사장이야말로 재단이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희망의 마중물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우원식 의장, 대선·개헌 동시투표론 철회

“각 정당 의견 수렴…대선주자들, 개헌 골자 공약 제시를”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자신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도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며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사흘 전인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

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뒤편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제안에 선행했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며 향후 다시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조기 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라며 “12·3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이 합의의 내용,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주자가 공약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우 의장은 자신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이 내각제 개헌과 다름없다는 민주당의 비판과 관련해 “저는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제안에서도 4년 중임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며 “대통령령제는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이를 버리는 내각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이유로 저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합리적 토론을 위촉시키고 분쇄하는 선동”이라며 “경쟁·존중·조율하고 조정하려는 노력 없이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민주, ‘박찬대 대행’ 체제…내달 초 대선 후보 확정

박범계 필두 선관위 출범
공약 마련 정책 역량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대권 도전을 위해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본격적인 대선 체제를 가동하게 됐다.

대선 후보를 확정하고 당이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때까지는 이 대표로부터 지휘봉을 건네받은 박 원내대표가 조기 대선 승리를 향해 진두지휘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도 띄웠다.

위원장에는 4선의 박범계 의원, 부위원

선관위는 조만간 각 후보 캠프 관계자들과 경선 ‘몰미팅’을 하고 조만간 경선 일정과 규칙 등을 확정지를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다음 주 중 후보 등록을 받고, 2주 동안 4개 권역(호남,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제주)에서 지역 순회 경선을 한 뒤, 5월 4일경 후보를 확정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선(6월 3일) 30일 전 후보를 확정 짓는 시간표다.

당초 이달 안에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경선 공고부터 접수, 경선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물리적으

로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박 직무대행과 선관위에 주어진 속제는 유력 주자인 이 대표와, 이에 도전하는 비명(비이재명) 계 후보 간 이해관계가 갈리는 경선 틀을 공정하게 조율하는 문제다.

지난 20대 대선 때 특별당규로 정한 예비경선 규칙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 반영’ 방식이지만, 비명계는 이 대표가 당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만큼 당원과 일반 국민 구분 없이 ‘100% 국민 투표’로 후보를 뽑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당도 대선을 겨냥해 경제 분야 위주의 정책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장 전략을 담당하는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이날 오후 확대 개편 출범식을 한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이끄는 위원회는 미래성장비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글로벌 디지털 금융 등 18개 정책분과 및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지역 경제 조직으로 대폭 확대해 운영된다.

민주당은 대선 승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도층 공략을 위한 경제·미래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공약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이성오 기자

화를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료 행사, 민원 상담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당·정책 등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도 방문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온라인에 의정보고서를 게시·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인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

화물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료 행사, 민원 상담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당·정책 등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도 방문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온라인에 의정보고서를 게시·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인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료 행사, 민원 상담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당·정책 등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도 방문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온라인에 의정보고서를 게시·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인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료 행사, 민원 상담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당·정책 등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도 방문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온라인에 의정보고서를 게시·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인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료 행사, 민원 상담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당·정책 등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도 방문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온라인에 의정보고서를 게시·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인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료 행사, 민원 상담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당·정책 등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도 방문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온라인에 의정보고서를 게시·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인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료 행사, 민원 상담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당·정책 등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도 방문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온라인에 의정보고서를 게시·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인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료 행사, 민원 상담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당·정책 등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도 방문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온라인에 의정보고서를 게시·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인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료 행사, 민원 상담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당·정책 등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도 방문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온라인에 의정보고서를 게시·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인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료 행사, 민원 상담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당·정책 등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도 방문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온라인에 의정보고서를 게시·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인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료 행사, 민원 상담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당·정책 등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도 방문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온라인에 의정보고서를 게시·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인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료 행사, 민원 상담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당·정책 등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도 방문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온라인에 의정보고서를 게시·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인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료 행사, 민원 상담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당·정책 등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도 방문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온라인에 의정보고서를 게시·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인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료 행사, 민원 상담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당·정책 등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도 방문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온라인에 의정보고서를 게시·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인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료 행사, 민원 상담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당·정책 등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도 방문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온라인에 의정보고서를 게시·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인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료 행사, 민원 상담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당·정책 등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도 방문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온라인에 의정보고서를 게시·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인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료 행사, 민원 상담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당·정책 등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도 방문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온라인에 의정보고서를 게시·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인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료 행사, 민원 상담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당·정책 등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도 방문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온라인에 의정보고서를 게시·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인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료 행사, 민원 상담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당·정책 등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도 방문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온라인에 의정보고서를 게시·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인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료 행사, 민원 상담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당·정책 등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도 방문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온라인에 의정보고서를 게시·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인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료 행사, 민원 상담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당·정책 등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도 방문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온라인에 의정보고서를 게시·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인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